

제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

충북사회복지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일시 · 장소 | 2023. 12. 6.(수) 13:30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

PROGRAM

사회: 백운기(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시간		식순	내용
13:00~13:30		등록	
〈1부〉 제100회 충북 사회 복지 포럼	13:30~13:40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인사
	13:40~14:10	인사말 / 발표	충북사회복지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14:10~15:10	분야별 토론	토론 1. 지역사회복지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2. 장애인복지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론 3. 노인복지 김준환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장
	15:10~15:20	질의응답	사전/현장 질문 질의응답 폐회(기념품 증정)
15:20~15:30		휴식	
〈2부〉 2023년 우수 사회 복지 자원 봉사 시상식	15:30~15:40	개회	내빈소개 및 인사
	15:40~16:30	기념식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3명) - 충청북도지사 표창(8명/개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3명/개소) - TV조선 대표이사상(1개소)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8명)
			우수 관리센터 현판 증정식(5개소)
			개회사(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격려사(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단체사진 촬영
16:30	폐회	폐회(기념품 증정)	

| CONTENTS |

07 ■ 발표

충북사회복지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21 ■ 종합토론

토론 1. 지역사회복지
|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2. 장애인복지
|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론 3. 노인복지
| 김준환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67 ■ 별첨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현황(1회~100회)

충북사회복지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 김 영 석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제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

2023년 12월 6일(수) 13:30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충북사회복지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목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소개

충북사회복지포럼 진행과정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진행방향

도움을 주신 분들



과거

현재

미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소개



기관설립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써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충북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대표: 김영석)

1985. 3. 20.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창립
(중앙협의회 지부형태)

1998. 11. 30.

사회복지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설치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주요연혁



1980s

1985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창립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충북지부 형식)
(초대회장: 김오곤 회장 취임)

1987

· 제2대 김건중 회장 취임

1989

· 제3대 이경훈 회장 취임



1990s

1990

· 제4대 손용섭 회장 취임
(~7대까지 연임)

1996

· 부설 지역복지봉사센터를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로 개칭



199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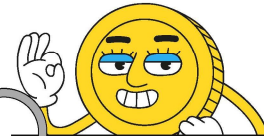
1998

· 제8대 강홍조 회장 취임
· '충북사회복지'신문 제1호 발간

· **사회복지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설립

1999

· 제9대 표갑수 회장 취임
(~제12대까지 연임)
· **충북사회복지포럼 1회 개최**



2000s

2000

·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 기부식물나눔은행(FOODBANK) 개소

200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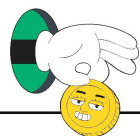
2006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수탁 운영
(~22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주요연혁



2000s

2007

· '충북사회복지'신문 제100호 발간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교육기관 지정(충청북도)

2008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기관 지정(사회보장정보원)



2010s

2010

· 제13대 김창기 회장 취임
(~14대까지 연임)

2013

· 휴먼네트워크(멘토링) 거점센터 지정
·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선정
· 법률출덕터 배재기관 선정(~24년)

2014

· 신종년 사회공헌사업 수행기관 선정
(~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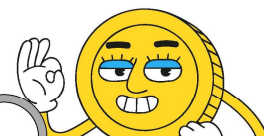
2010s

2015

· 제15대 심의보 회장 취임
· '충북사회복지'신문 제200호 발간

2016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19년)
· 통일부 공모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기관 선정(~23년)



2010s

2018

· 제16대 김영석 회장 취임
(~17대까지 연임)

2019

· 충청북도 위탁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수행(~23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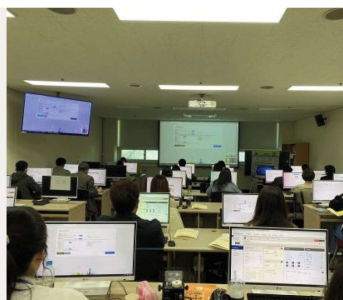


주요사업



사회복지 조사연구

사회복지조사연구
충북사회복지포럼



출판홍보

충북사회복지신문 발간
충북사회복지가이드 제작

협의조정사업

직능별/영역별 협의조정
사회복지직능단체 협력사업
시군사회복지협의회 협력사업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회복지 정보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종관리사업
연합봉사단 활동지원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



주요사업



충북복지넷

사회복지 정보제공
충북복지넷 운영
충북복지 주간동향
현장&법제 카드뉴스

교육훈련

충북도민복지교육
희망이음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충북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역소외계층 식품·생활용품 등 지원



법률상담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지역사회공헌 기업 발굴 및 인정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주요사업



좋은이웃들사업

지역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멘토링사업

멘토링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충북해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행정재산 관리 수탁사업

행정재산 유지·보수·관리

지역사회봉사단

전문봉사단 발굴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충북사회복지포럼 진행과정

충북사회복지포럼?

변화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충북도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현황

HISTORY

- 1999** 1999.04.02. 제1회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1999.04.27. 제2회 충북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대책
1999.05.12. 제3회 저소득층의 복지욕구와 지방정부의 지원대책
1999.06.25. 제4회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전략
1999.08.13. 제5회 21세기 사회복지의 도전
1999.10.01. 제6회 21세기 바람직한 노후생활
1999.11.29. 제7회 충북사회복지 5개년 종합계획
1999.12.15. 제8회 21세기 사회복지시설의 나아갈 방향
- 2000** 2000.04.28. 제9회 충북자원봉사체계의 통합관리 방안
2000.02.17. 제10회 충북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 2001** 2001.03.21. 제11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2001.10.10. 제12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 2002** 2002.05.02. 제13회 장애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재활시설의 발전방안
2002.05.21. 제14회 대우꿈동산 중단기 발전계획
2002.09.06. 제15회 일본사회복지의 기초구조 개혁
2002.11.08. 제16회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행정공무원의 역할

HISTORY

- 2003** 2003.03.25. 제17회 일본의 보육현황과 향후의 과제
2003.06.19. 제18회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자원봉사 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2003.11.12. 제19회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과제와 전망
2003.12.19. 제20회 푸드뱅크 사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
- 2004** 2004.05.03. 제21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토
2004.06.09. 제22회 충주지역 고령인구의 복지현황 및 정책적 함의
2004.09.10. 제23회 현행 장묘 문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4.12.03. 제24회 지방화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 2005** 2005.04.01. 제25회 충북도내 사회복지근무자의 처우개선 방안
2005.06.03. 제26회 학교폭력의 원인·현황 및 대책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안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과 불평등개선
자활사업의 현황과 제도개선
2005.10.26. 제27회 농촌 노인복지의 실태에 관한 연구
2005.12.08. 제28회 지역주민통합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
- 2006** 2006.04.26. 제29회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제3의길과 NHS 개혁
2006.09.02. 제30회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006.11.28. 제31회 지역단위 사회복지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T활용방안

HISTORY

- 2007** 2007.03.29. 제32회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2007.06.21. 제33회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역량강화
2007.10.15. 제34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과제
2007.12.18. 제35회 교육복지 실태 및 발전방향
- 2008** 2008.03.25. 제36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문인력 양성 실태 및 개선방안
2008.07.29. 제37회 여성결혼이민자실태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2008.09.25. 제38회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노인의 건강실태와 건강불평등 해소방안
2008.12.08. 제39회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과정을 통해 본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방안
- 2009** 2009.03.26. 제40회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개요 및 파급효과 분석
2009.09.23. 제41회 자원봉사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9.11.12. 제42회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연계 발전 방안
2009.12.18. 제43회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습체계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집담회
- 2010** 2010.03.30. 제44회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2010.05.19. 제45회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
2010.10.14. 제46회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2010.11.29. 제47회 충북지역 아동·여성안전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HISTORY

- 2011** 2011.05.16. 제48회 충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문제
2011.06.24. 제49회 충청북도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연구
2011.10.27. 제50회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2011.11.28. 제51회 지역적 접근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2012** 2012.03.27. 제52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2012.04.13. 제53회 장애인복지법 시행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대응방안
2012.05.30. 제54회 2012년 상담 활동가를 위한 상담슈퍼비전
2012.10.11. 제55회 자활사업의 현재인식과 사회적 경제조직체로의 전망
2012.10.19. 제56회 충북 노인복지를 위한 역량강화 논의와 방안
2012.10.31. 제57회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2012.11.01. 제58회 보육제도 변화에 따른 시설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2012.11.23. 제59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개선방향
2012.12.06. 제60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내부 마케팅을 통한 서비스 경영
2012.12.20. 제61회 아동성폭력사례 및 처리 구제방안

HISTORY

- 2013** 2013.02.27. 제62회 노인복지실천에서 서비스 질의 갈등을 풀다
2013.06.14. 제63회 융합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국가론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
2013.09.24. 제64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2013.09.25. 제65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찾기
2013.10.01. 제66회 충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적정화 방안
2013.10.25. 제67회 노인복지시설 근무자의 전문성 지향
2013.11.05. 제68회 뉴질랜드 노인복지의 현실과 과제
2013.11.22. 제69회 시설아동 교육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2013.12.07. 제70회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함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2013.12.16. 제71회 충북 맞춤형 다문화 정책

- 2014** 2014.05.13. 제72회 새 시대의 효: 전통-변화-적응
2014.10.30. 제73회 퇴직전문가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2014.11.24. 제74회 비영리조직 서비스 마케팅
2014.11.25. 제75회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2014.11.25. 제76회 사회복지조사와 인포그래픽
2014.12.11. 제77회 비영리조직 전략 기획
2014.12.23. 제78회 의사소통을 위한 자기분석
2014.12.23. 제79회 <연극세미나> 장애인복지 실태 현황 및 발전 방안
2014.12.29. 제80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생활 관리방안
2014.12.29. 제81회 고령화 사회의 성공적인 노화 -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

HISTORY

- 2015** 2015.10.15. 제82회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현황과 과제
2015.10.22. 제83회 중앙정부 사회보장정비 방안에 대한 충북지역 복지계 대응 토론회
2015.11.20. 제84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토론회
- 2016** 2016.06.21. 제85회 민·관협력 지역복지 모델개발; 마을에서 성장한다
2016.12.26. 제86회 충청북도 사회복지수준 분석
- 2017** 2017.02.10. 제87회 충북도민 복지의식 조사
2017.11.23. 제88회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고독감이 노인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2017.12.07. 제89회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 표준프로그램 개발 연구
- 2018** 2018.05.23. 제90회 2018 충북사회복지계가 제안하는 충북지역 복지의제 「복지는 생활입니다」
2018.11.28. 제91회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2018.12.19. 제92회 정신건강화 치매관련 요인이 치매태도에 미치는 영향
- 2019** 2019.07.11. 제93회 「충북사회복지」신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할과 방안
2019.11.29. 제94회 커뮤니티 케어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의 모델 연구
- 2021** 2021.11.26. 제95회 노인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노인복지관의 역할
2021.12.07. 제96회 충북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진단과 발전적 대안 모색
- 2022** 2022.10.05. 제97회 충북형 지역사회기반 일자리사업 '1인1기'의 성과 및 참여장애인의 고용유지 요인
2022.12.14. 제98회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관의 ESG경영실태와 대응과제
- 2023** 2023.11.28. 제99회 스마트복지 플랫폼 효과성 연구 발표 및 성과공유회
2023.12.06. 제100회 충북사회복지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문제점 및 향후 진행방향

문제점

- 1 조사연구사업 예산 부족
- 2 도내 직능단체의 관심 부족
- 3 충청북도, 의회의 참여율 저조
- 4 시설 종사자의 참여율 저조



- 1 조사연구(1회/5,000천원)
충북사회복지포럼(1회/2,000천원)
- 2 직능단체에서 필요한 현안으로 진행하고자
연계를 요청하나, 진행의사가 없는 곳이 다수임
- 3 토론자 중 1인은 충청북도나 충청북도의회에서
섭외하려고 해나 참여의사가 적음
- 4 업무의 과중, 관심 부족으로 인해
시설 종사자의 참여율이 저조함

**향후 진행방향은
토론자분들께서 찾아주시기 바람**

도움을 주신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역대 회장 15분

100회까지 발제자/토론자

협의회 임·회원

사·군사회복지협의회

도내 직능단체

충청권 사·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토 론 1. 김 현 진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2. 윤 상 용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 론 3. 김 준 환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장

토론 1.

김 현 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북사회복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지역사회복지 부문

1. 지역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지역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실천적·기술적 접근과 이해가 익숙하지만 제도적·정책적 개념으로 활용과 이해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 사회복지의 활동과 급여·수급의 작동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복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책·제도가 실행되는 장이라 할 수 있다(류만희, 2022).
-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다(오정수·류진석, 2020).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접근단위로 하여 그 구성원들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그 기능이 설명된다.
-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일상의 실질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부재한 지역사회복지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복지

- 2003년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 미국 벤처투자가)에 의해 처음 사용된 ‘뉴노멀(New Normal)’은 예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IT버블과 같은 큰 변화 이후에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과 규칙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말한다. 뉴노멀 시대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이재완, 2020).
- 사전적 의미로 뉴노멀(New Normal)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며, 시대란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이다. 결국 지금의 뉴노멀 시대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시대이다.
-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변화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진행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성과가 있고, 이로 인해 인류는 삶의 방식을 변화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이러한 시대에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이재완(2020)은 ‘지역사회의 복지’의 실현을 위한 단서를 주민자치와 복지의 융합에서 찾아야 한다. 즉,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의 복지’로 파악할 때 지역사회 전체성, 고유성, 다양성, 참여성(주민참여), 협력성, 자주성, 민주성 등을 통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환경위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실천

-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등장만큼이나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담론만 간헐적으로 있었을 뿐 학문적 또는 정책적으로 명료한 개념 정의도 거의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 하지선 외(2022)의 연구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지역사회복지의 접근을 ‘환경복지’로 설명하는데 환경복지의 개념들이 환경과 사회복지의 결합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환경이슈를 바라보는 지점과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해결의 지향 등

각 용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 관련 용어로는 ‘환경적 복지’, ‘환경복지’, ‘생태복지’, ‘녹색사회복지’, ‘환경불평등’, ‘환경정의’ 등 다양하다.

- 환경사회복지실천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인간의 일상적 삶의 생태적 전환을 전제하기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상적 삶에 밀착된 실천일 수밖에 없다(정환도이재근, 2014).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필요성은 자연 및 사회적 재난과 관련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안전관리체계와도 연결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 지역소멸과 지역사회복지

- 지방소멸 위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감소의 영향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이동(유출)이 더해지면서 소멸위험을 키우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렇게 중소도시의 쇠퇴에 직격탄이 되었고 4차 산업혁명만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 소멸과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것이다(마강래, 2017).
- 2021년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66호)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비율 증가, 정주 여건 낙후 등으로 인해 특수한 복지 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산업육성, 인구유입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의 물리적 공간인 지역소멸 문제에 주목하면서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과 정부의 지역소멸 방지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읍면동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항상 진행 중인 과제이며 계속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필두로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주민통합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읍면동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인 변화, 개선과정이었다.

-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시군구로부터 읍면동으로 중심 역할 단위가 전환되어 대민 접근성이 높아지고 영역과 분야에 따라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고령화, 돌봄서비스 욕구가 증가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사 배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소집단 건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업무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등이 대표적인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에 해당한다.

2. 충북사회복지포럼을 통해 본 충북의 지역사회복지 대응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나타난 충북의 지역사회복지 배경

- (인구구조의 변화)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
- 충북의 경우 인구가 2015년 1,583,952명에서 2021년 1,597,427명으로 0.8% 증가한 데 비해 세대 수는 2015년 601,856가구에서 2021년 695,611가구로 15.6% 증가하여 인구 수보다 세대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 (과학기술의 활용) 지역 문제 해결이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사회환경으로서 IoT, AI 등 과학기술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과정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돌봄, 교육, 문화, 생활 안전 등 일상과 관련된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계·협력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 수립부터 문제 해결 과정까지 지역주민과 여러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민·관계 기관·지자체가 제기한 사안의 심각성·시급성을 기준으로 충북도가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지자체와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서비스의 양적 성장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인증제 도입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북의 경우 2022년 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 충북사회복지포럼 분석

- 100회를 맞은 충북사회복지포럼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회 정도 지역사회복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앞서 환경변화에서 다른 영역의 발제가 많이 이루어졌다.
-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역사회복지를 해석한다면 100회 동안 다루어진 주제가 대부분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아래 표를 중심으로 발표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아동, 청소년, 일자리, 치매, 사회복지관, 다문화 등 대상별 주제가 7건,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제 2건, 사회복지기관 운영 관련 주제 3건, 충북의 복지수준 및 도민의식 조사 등이 3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8년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복지 의제를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운동적 성격의 주제도 찾아볼 수 있다.
- 포럼의 형식은 토론회 뿐 아니라 특강, 가이드 발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와 시의성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홍보성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다소 실무교육 형태의 주제들이 다루어진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패널리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포럼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선정과 발제자 선정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충북사회복지포럼을 통해 제시된 주제로 인해 지역사회 변화를 얼마나 도모했는지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충북의 사회복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포럼 실시 이후의 지역사회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 100회 포럼 중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주제

	주제	발제자	비고
63회 (`13.6.)	1. 융합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국가론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	류시문(한맥도시개발 회장) 김혜미(한국사회복지공제회)	특강
69회 (`13.11.)	시설아동교육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윤병훈(前양업고등학교 교장)	특강
70회 (`13.12.)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자살 유발 정서·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	심재희(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71회 (`13.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 방안 충북 맞춤형 다문화정책	김명현(대구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변혜정(충북여성정책관)	
74회 (`14.11.)	비영리조직 서비스 마케팅	배노제(한국마케팅교육연구소장)	
75~76회 (`14.11.)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 사회복지조사와 인포그래픽 적용	서정민(충북융합복지연구소장)	
77회	전략기획 기본 이론과 실무 적용	한국마케팅교육연구소	
78회 (`14.12.)	의사소통을 통한 자기분석	서경숙(대전한방병원 심리상담센터장)	
83회 (`15.10.)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이태수(꽃동네대 대학원장)	
85회 (`16.6.)	복지마을 네트워크의 구상과 실천 : 뉴거버넌스를 위하여	김기홍(농민신문/사회학 박사)	특강
	1. 읍·면·동단위 민관협력 현황 연구 2. 청주시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사례 3. 복지마을 읍·면·동 민관협력 방안	유용식(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신옥(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오정아(충북대 외래교수)	
86회 (`16.12.)	충청북도 사회복지수준 분석	나동석(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87회 (`17.2.)	1. 충북도민 복지의식조사 결과 2. 복지영역별 진단 및 방향: 교통복지 3. 복지영역별 진단 및 방향: 고용복지	최은희(충북연구원) 원광희(충북연구원) 함창모(충북연구원)	
89회 (`17.12.)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 표준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현진(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90회	2018 충북사회복지계가 제안하는 충북지역 복지 의제	2018 충북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시민단체	
91회 (`18.11.)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박종효(사)일하는공동체 대표)	
92회 (`18.12.)	정신건강과 치매관련 요인이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추용(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96회 (`21.12.)	충북지역 사회복지관의 운영진단과 발전적 대안 모색	김현진(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98회 (`22.12.)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관의 ESG 경영실태와 대응과제	김준수(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3. 충북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제안

- 코로나 등으로 사회적 안전이 무너졌던 지난 몇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전에 없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생존의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주제들이 충북사회복지포럼에서 다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

-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 3천원 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 2천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지만 5분위 가구(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4.1% 증가한 1,084만 3천원으로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 이렇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고소득층 가구 소득은 크게 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다루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2) 맞춤형 사회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 지자체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위험성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즉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간의 복지자원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차별화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담을 수 있는 행정체계의 개편 (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충북사회복지포럼이 도내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교통과 고용에 대한 논의(87회)를 해왔던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교통, 보건복지, 고용에 대한 주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객관적인 진단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이므로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인력, 운영방식 개선, 조직과 기능의 재조정, 첨단화 및 시스템화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기정훈(2020)은 이에 대해 지방인구소멸의 가능성에 따라 노인복지 중심의 서비스,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다양한 수요 계층을 충족시키는 사회복지서비스로 방향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 사회적 돌봄 체계의 재정립 : 가정에 전가된 돌봄 책임

-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주민을 모두 포괄한다 해도 대상별, 서비스 기능별로 구분하여 접근할 때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발굴 및 지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은 시급한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기관의 휴관에 따른 대응이 적절치 못했던 것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 다만, 돌봄사업은 돌봄대상자 뿐 아니라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돌봄 가족의 소진 및 과로예방 등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과 논의를 통해 지역주도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일상의 대응에 대한 논의

- 개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 및 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92회 포럼에서 다루어졌지만, 정신건강과 치매 관련 요인을 주제로 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매뉴얼을 구축하거나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다.
- 구체적으로 재난 및 위기대응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재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강화 방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사회복지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 새로운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원격의료, 원격돌봄, AI 돌봄 로봇을 통한 돌봄 등 원격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원과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5) 환경과 관련한 복지의 논의

-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관련 주제는 그동안 포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경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기대응전략 수립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필요하다.
 - 생태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에 따라 대응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역형 환경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분야별 환경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 최근 활성화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이러한 기후변화와 연결하여 진행하도록 하거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체계 구축, 지역 환경 개선 및 자원재활용 방안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환경변화와 관련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다자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형용(2022). 뉴노멀(New Normal)복지의 도래: COVID-19가 앞당긴 미래 사회보호의 과제.
- 기정훈(2020).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 연구 제31권 제2호.
- 류만희(2022). 새 정부에서 지역사회복지: 과제와 전망.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자료.
- 마강래(2017).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 이재완(2020).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72
- 하지선·우아영·김좌겸(2023) 환경사회복지실천의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자치구사회복지 협의회 환경위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 연구: 서울시 E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2)

토론 2.

윤 상 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장애인복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디로 가야하는가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40여 년간 다른 사회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최근 20여 년은 다른 여느 분야보다 장애인복지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00년과 2003년의 장애 범주 확대와 더불어 2001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 수급자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2배 이상 인상됨으로써 소득보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비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등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가 확대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가 등장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확충도 계속되었다.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복지분야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발달재활서비스) 등과 같은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는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다. 또한 2016년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지도전행동지원서비스(서울시 챌린지사업, 광주융합돌봄서비스 등), 발달 장애인긴급돌봄서비스 등 장애 특성상 더 많은 지원과 집중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져 왔다. 이렇듯 지난 40년간, 특히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정책의 역동적인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립생활이념의 확대에서 비롯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조직적 연대와 다양한 복지권 운동,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결합하여

나타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성과에 대한 가시적 결과물은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증가이다. 1981년에 14억 원으로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이후 1990년에 296억 원으로 10년동안 20배가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437억 원으로 1990년보다 4.8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0년 예산은 6,475억 원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5배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 예산은 32,474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24년 예산(안)은 50,013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본고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인 장애인복지예산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진단해보고 동시에 지난 40년간의 장애인복지 변화 흐름에 대한 통사적 고찰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예산 수준

1)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 장애급여의 축소와 적극적 노동시장의 강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OECD 회원국들은 장애인정책의 개혁을 시도해왔는데, 이는 장애급여의 축소와 적극적 노동시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전환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은 사회보장정책의 하위 영역으로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정책에서 장애인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접근(specialized approach)으로 볼 수 있다. 산업화 초기, 장애는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자의 기표였으며, 노동능력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근대 공공부조가 확립되면서 장애인을 시설 내에서 수용 보호하는 것이 당시의 장애인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동력의 개선 및 분업과 표준화 공정에 기반한 대량생산체제 산업사회의 등장 이후 공적 연금, 사회수당 및 공공부조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대거 도입되고 확충되던 복지국가 황금기에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공공부조에서 벗어나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 부조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급여가 출현함으로써 비로소 장애인이라는 고유의 특성과 욕구를 갖고 있는 하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일반 사회 보장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인상되는 제도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주지하듯이 1970년대 중반 경제침체에 따른 복지국가 위기론 담론의 등장 이후 서구 복지국가들은 우파의 집권이라는 정치적 지형을 배경으로 복지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복지지출 감축을 지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복지지출 감축의 핵심 내용은 수급 자격

강화, 급여 삭감 및 조건부 수급 등 근로연계 장치의 도입이었으며, 이는 특히 노령연금과 기초보장, 실업급여 등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근로연령대 인구 중 근로무능력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장애연금, 장애부조 등의 장애 급여는 이러한 경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의 저하에 따른 재정 압박속에서 장애급여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자 결국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급여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소득활동)능력 평가 사정 강화, 부분적 근로능력자(직업적 경증 장애인)에 대한 부분 급여 도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 내용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개편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정책 레짐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정책의 요소(Compensation policy component), 즉 급여 정책이 축소되고 사회통합정책의 요소(Integration policy component)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OECD, 2010).

2) 장애인정책 레짐별 장애 지출 수준 및 사회정책적 맥락

OECD(2010)는 회원국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장애인정책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들의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각각 10개씩 선정하여 국가 점수를 산출하였으며¹⁾, 이들 점수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회원국들의 장애인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Esping-Anderssen의 복지국가 레짐과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회원국들의 장애인정책 유형이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별 분포도 동일하나, 일부 국가의 유형이 Esping-Anderssen의 분류와 다른 것과²⁾ 3개 유형 안에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세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정책 레짐별 2105년 기준 GDP 대비 장애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포함된 사민주의 모델의 평균 비중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포함된 조합주의 모델이 2.01%,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된 자유주의 모델이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 지출을 포함한

1) 장애급여 세부 지표는 1)지급 범위 2)최저 장애(근로무능력) 기준 3)최고 급여 장애(근로무능력) 기준 4)최고 급여 수준 5)급여 지급의 영속성 6)의학적 진단 기준 7)근로능력 사정 기준 8)상병급여 수준 9)상병급여 지급 기간 10)상병급여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지표마다 최고 5점에서 최저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지표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5.9점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1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서비스 세부 지표는 1)지원대상의 일관성 2)급여와 지원체계의 연계 3)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4)지원 고용 프로그램 5)임금보조고용 프로그램 6)보호 고용 프로그램 7)직업재활서비스의 포괄성 8)재활서비스 제공 시기 9)장애급여 지급 유예 조치 10)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지표마다 최고 5점에서 최저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OECD 회원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표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4.9점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와 더불어 멕시코(8점) 다음으로 가장 낮은 16점으로 나타났다.

2) 조합주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영국·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아일랜드는 조합주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조합주의 모델이 25.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사민주의 모델 24.16%, 자유주의 모델 18.09%로 나타나 장애인정책 유형과 전통적 복지국가 레짐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 장애인정책 유형별 장애지출 수준 및 주요 지표 현황

(단위: %)

장애인정책 유형	국가	고용률	실업률	장애급여 수급률	GDP대비 국가채무비중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GDP대비 장애지출비중
사민주의 모델	스웨덴	76.2	7.0	6.4	58.6	26.4	4.1
	노르웨이	74.3	4.8	13.4	43.3	25.7	4.3
	덴마크	72.7	6.0	5.8	44.7	28.7	4.4
	핀란드	69.1	8.8	6.6	69.9	29.8	3.6
	독일	74.7	4.1	6.9	69.2	25.1	2.1
	네덜란드	74.8	6.0	7.0	68.7	17.5	3.4
	스위스	79.6	4.9	17.0	38.6	15.9	2.2
	평균	74.49	5.94	9.01	56.14	24.16	3.44
조합주의 모델	오스트리아	71.5	6.0	3.2	90.9	27.8	2.1
	프랑스	64.2	10.0	7.0	109.3	32.0	1.7
	벨기에	62.3	7.9	7.8	109.3	29.2	2.9
	아일랜드	66.4	8.4	5.9	77.4	14.9	1.4
	이탈리아	57.3	11.7	4.5	134.8	28.3	1.8
	포르투갈	65.3	11.2	3.3	139.1	23.7	1.8
	스페인	59.5	19.6	3.8	104.5	24.3	2.4
	평균	63.79	10.69	5.07	109.33	25.74	2.01
자유주의 모델	영국	73.5	4.8	5.7	92.0	21.2	1.9
	미국	69.4	4.9	9.4	138.3	18.9	1.4
	호주	72.4	5.7	4.9	68.1	17.8	2.5
	캐나다	72.6	7.0	1.7	112.8	17.4	0.8
	뉴질랜드	75.6	5.1	2.8	n.a	18.9	2.5
	일본	74.4	3.1	2.7	235.6	21.9	1.0
	한국	66.1	3.7	1.8	41.2	10.5	0.6
	평균	72.00	4.90	4.14	114.7	18.09	1.53

주: GDP대비 장애지출 비중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나머지는 모두 2016년 기준임.
단, 일본의 GDP대비 공공사회지출비중은 2015년 기준임.

자료: 1) OECD Statistics(National Accounts)>>Quarterly Public Sector Debt. '16년 12월 기준
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3) OECD Social Benefit Recipients Database(SOCR).

2. 한국의 장애인예산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어느 수준인가?

앞서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지출 수준은 OECD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0.627%로서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2.25%)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과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 장애인복지예산 지출 비중 추이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한국	0.24	0.32	0.50	0.63
OECD 평균	2.18	2.07	2.15	2.3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출 통계는 주요 지출 분야에 관한 세부 통계도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분포를 보면, OECD 평균의 경우, 현금급여 79%, 현물급여 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현금급여 55%, 현물급여 45%로 현금급여 비중이 매우 낮았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구성하는 각 세부 급여의 GDP대비 지출 비중에 있어서 OECD 회원국 평균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금급여 중에서는 장애연금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이어서 일반 상병수당(미도입), 기타 현금급여 순으로 격차를 보였다. 또한 현물급여 중에서는 시설보호 및 가사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가 OECD 회원국 평균과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표 3〉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GDP 대비 지출 비중

구분	현금급여						현물급여			
	장애연금	장애연금 (산재)	상병수당 (산재)	일반 상병수당	기타 현금급여	소계	시설보호 재가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소계
OECD 평균(A)	0.94	0.05	0.06	0.33	0.22	1.60	0.25	0.08	0.09	0.42
한국(B)	0.11	0.11	0.05	0.0	0.06	0.33	0.10	0.01	0.16	0.27
A-B	0.83	-0.06	0.01	0.31	0.16	1.27	0.15	0.07	-0.07	0.15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22.1.2. 추출)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미래 과제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변천 과정과 전망

한국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정책의 핵심적 특징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와 같이 해방 이후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을 포함하여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전에 해당하는 1기는 단순시설 보호의 시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에 해당하는 2기는 제한적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전문화의 시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는 3기는 소득보장의 확대와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권리 강화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장애인정책 흐름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의 4기는 기본소득 도입을 염두에 둔 충분한 소득보장과 이용자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기의 개혁과제 중 핵심적인 사항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대상 효율성과 충분성을 제고하고 장애수당을 완전 사회수당 급여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혁신이며 동시에 분절적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과 통제권을 극대화하는 개별유연성 현금급여(개인예산)의 도입이 될 것이다.

〈표 4〉 한국 장애인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구분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특징
		재가서비스	거주시설	
1기: 해방~장애인 복지법제정 이전	-	-	<u>양적 확충</u>	단순 시설보호
2기: 장애인복지법 제정~2000년 대 중반	-장애연금(국민연금) 도입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회재활시설 설치	<u>전문화 추구</u> 유형재편 재활/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평가	<u>제한적 소득보장</u> 과 사회서비스의 전문화
3기: 2000년대 후반~현재	-장애수당 확대 -장애인연금 도입	-자립생활센터/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애인권익옹호 기관 등 확충 -활동지원서비스 도입과 확대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u>인권 추구</u> 소규모화 인권지킴이단 서비스 최저기준	<u>소득보장의 확대</u> 와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권리 강화
4기: 미래	-장애연금 개혁(장애판정기준 개선 및 지급액 인상 등) -장애인연금 개혁(장애판정기준 개선 및 지급액 인상 등) -장애수당의 완전 사회수당화 (소득기준 폐지)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개별유연성 현금급여(개 인예산) 도입	<u>자립생활 추구</u> 거주시설 변환 탈시설 지원	<u>충분한 소득보장</u> 과 이용자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2) 장애인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거: Fraser의 3차원적 정의론

미국의 정치철학자 Fraser(2009)는 오늘날 사회구조적으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세 가지 영역에서 부정의(injustice) 상태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첫번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의 계급 구조이며, 이는 정의의 경제적 차원에 상응하는 것이다. 두번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질서(status order)이며, 이는 정의의 문화적 차원에 상응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구조와 신분질서는, 비록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서로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각각은 서로에 대해 일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몇몇 경제주의적 분배정의론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무시가 불평등한 분배의 부차적 효과로 축소될 수는 없다. 또한 역으로 몇몇 문화주의적 인정론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불평등한 분배가 무시의 부수현상으로 축소될 수도 없다. 결국 인정이론과 분배이론 모두 그 자체로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의에 대한 적합한 이해를 제공할 수 없다. 오직 분배와 인정을 포괄하는 이차원적 이론만이 필요한 수준의 사회이론적 복잡성과 도덕철학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 정의의 세번째 차원은 정치적인 것이다. (...) 정치공동체의 경계가 실제로는 대표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잘못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규칙이 공적인 토의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규칙이 공적인 의사결정에서 모든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표하고 있는가? 이러한 대표의 문제들은 특별히 정치적이다 (...) 대표가 정치적인 것을 정의하는 핵심이라면, 독특한 정치적 부정의는 대표불능(misrepresentation)이다(프레이저, 2009; 37-40).”

요약하자면, 경제적 차원에서의 계급 구조에 의한 잘못된 분배, 문화적 차원에서의 신분 질서에 의한 무시, 정치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규칙에서의 대표 불능이 사회구조적 억압의 구체적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이저의 진단은 필연적으로 각각의 부정의 상태를 교정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를 요구하는데 사회경제구조의 배제에서 비롯된 빈곤과 물질적 박탈에 대한 보상으로서 경제적 재분배(Redistribution), 가치절하, 낙인화 등 문화구조에서 비롯된 지위의 회복으로서 문화적 인정(Recognition), 정치행위, 공식적 의사소통과정에서의 배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소수성 혹은 대표불능의 회복으로서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가 그것이다.

이러한 프레이저의 3차원적 정의론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억압의 양상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장애인을 표상하는 언표로서 ‘노동불능, 비정상, 의사무능력’은 각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서 장애인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나아가 프레이저의 3차원적 정의론은 인간 다양성의

한 조건에 불과한 손상에 근거한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획으로서 장애인정책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다. 즉 경제적 재분배를 위한 장애 소득보장의 충분성, 문화적 인정을 위한 돌봄(care)과 지원(support)의 확대, 정치적 대표를 위한 장애인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확대 등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넘어 정의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낙후 원인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사실상 멕시코와 더불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수준에서 최하위권의 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 투입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규모는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이 여전히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해 있고, 낮은 취업률과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의 수준에 있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장애인 정책 대상 인구가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진입 창구로서 등록 장애의 범주가 전체 신체 기능의 제약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³⁾ 더불어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제도가 장애 상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서비스)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 주요 선진 외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도 최하위 수준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 비중을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장애인정책 프로그램 수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기회비용 보전을 위한 보호자 수당, 인적자본으로서의 형성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자산축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3) 우리나라는 전체 신체 기능 중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만을 장애로 인정하는 폐쇄적(closed) 장애 등록 체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주요 선진 외국들은 대부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서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명시하지 않는 개방적 장애 등록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가. 장애인정책 대상 인구를 단계적으로 확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된 장애인 등록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즉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국가 및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대상으로 제외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장애인복지 제도의 기본 수급자격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등록으로 환원한 ‘단일 진입 단계(single gateway)’를 채택함으로써 잠재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경우 모든 공공 장애인복지에서 소외됨으로써 사회적 배제의 중첩으로 인한 비복지의 폐해 정도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 전 삶의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장애의 총체성에 주목하면서도 교육, 고용, 신체활동(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등 개별 생활 영역별로 비복지를 초래하는 장애의 속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 소득보장, 고용서비스, 특수교육, 활동지원 등의 주요 장애인정책 영역별로 각기 고유한 장애 진단(등록) 기준을 설정한 ‘다차원 진입 단계(multiple gateway)’를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사각지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소득, 고용,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별로 지원 욕구를 갖고 있는 시민을 선별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 마련을 위해 현행의 판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의 경우, 특정한 손상 유형(장애범주)에 관계없이 손상의 결과로서 근로 관련 기능상태와 노동시장의 변화 및 고용서비스 수준 등 환경적 맥락을 반영한 ‘소득활동능력(직업적장애)’ 개념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외 노인, 임산부 등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지원제도 및 고용서비스 등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책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을 비등록장애인(비등록정신질환자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정책 지출의 적정성 근거 마련을 통한 단계적 지출 확대 전략 수립

장애인복지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준거점으로서 OECD회원국 평균 장애인복지 지출 수준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즉, 전체 사회정책 영역 내에서 장애인정책의 조화를 고려하여 OECD의 평균 사회지출 대비 장애인정책 지출의 비중을 달성하는 것을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의 단기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OECD는 평균적으로 전체 사회지출의 10.8%를 장애인정책에 지출하고 있어 (2.25%/20.783%), 최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12.287%(2019년 기준)의 10.8%인 1.33%를 단기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정책 영역별 비전과 성과(outcome) 지표에 기반하여 장애인정책 예산을 설정하는 성과기반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영역	비전	성과 지표	전략
고용과 경제적 안정	장애가 있어도 미래를 꿈꾸고 삶에서 선택과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빈곤율(39.6%) ·장애인 고용율(34.6%)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연금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노령연금의 장애 포용성 강화 (수급연령 하향, 가입 전 장애의 인정 등)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목표액의 최저임금 연동 ·장애수당 지급 대상확대 및 지급액의 추가비용 보전 현실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 임금 보조
포용적 주거와 지역사회	장애가 있어도 접근가능하며, 장애특성에 맞게 디자인된 주택과 지역사회에 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미만 거주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율 ·장애인의 방송 접근 확보 수준 (60%)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지역사회중심의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주시설 재편 및 지원주택 도입 ·소규모 시설 편의시설 설치 강화
안전과 권익옹호	장애가 있어도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발생율 ·장애인 차별 인식	
개인 및 지역사회 지원	장애가 있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적돌봄서비스 수급률 ·장애인 보조기기 충족율	돌봄계열 서비스(활동지원제도, 주간활 동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근로지 원인제도, 주간보호시설 등)를 '개인 맞춤형 지원제도'로 통합하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량을 인상
교육과 학습	장애가 있어도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대학진학율(19.96%)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3.23%)	
건강과 웰빙	장애가 있어도 전 생애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 건강서비스 이용(4.7%)	

다. 새로운 급여(서비스)의 지속적 도입

우선적으로 가족돌봄제공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공공부조방식의 보호자수당(돌봄수당)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보호 수당’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점에서 보호자수당을 보호수당의 실제적 시행 방안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손상을 가진 개인이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적 불리(disadvantage)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방안 필요성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손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절하(낙인) → 교육·훈련기회의 제약 → 경제활동제약 → 자산축적의 기회 제약 → 자산형성에 대한 사후적 기회(자산형성지원제도) 제공 필요

덧붙여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와 기존 장애 급여(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차이점을 논증해보면,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손상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억압, 즉 장애 차별에 대한 사후적 보상과 함께 유예된 역량의 실현, 즉 더 나은 미래(the better life)에 대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기존 장애 급여는 소상을 가진 개인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데(생계유지) 필요한 소득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3.

김 준 환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들어가며

최근의 한국사회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적 과업 중에는 노인집단과 연계된 활동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복지는 타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비해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만큼이나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한국사회의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한 해가 다르게 법적,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통해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부응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사(老人福祉史)를 돌이켜 보면 노인복지영역은 법, 정책, 제도, 실천방법론 등 여러 측면에서 단기간에 놀라운 정도의 압축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사를 논할 때 그 출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학문적 관점에서의 본격적 논의가 가능한 시기는 대체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나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노인에 대한 복지의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인복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복지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자들도 이 시기의 노인복지의 특성을 요보호 노인 대상의 임시구호사업으로 특징짓고 있다. 1960년대는 노인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인 생활보호법이었던 점에서 노인만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보호 수준도 여전히 구빈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0년대는 점차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확대되었으며,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고,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경제개발의 강력한 논리에 밀려 노인복지는 외면당한 시기이다.

이렇게 복지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의 확립을 선결 조건으로 본다면 한국사회의 노인복지를 논할 출발점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부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국가차원에서 경로현장이 선포되자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정부차원에서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노인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과 문제, 해법의 제시를 위한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노인복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인복지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노인복지 관련 논문 주제들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통해 미래를 조망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방향과 역할정립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노인복지의 과거와 현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중에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우선적 정착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을 펴는 일반적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이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분야도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법의 제·개정 과정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비추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980년대

1980년대는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사(老人福祉史)에 있어 비로소 제도적 체계를 논할 수 있는 노인복지제도의 확립기라고 할 수 있다(박차상, 2002).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1980년대에 이룬 가장 큰 결실은 노인복지법(1981년) 제정이었다. 노인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노인이 복지의 주체로 떠오르고 국가 정책이 고려할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노인복지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 이는 압축적 성장이라고 불릴만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가 지속적으로 파생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 실시(198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1986) 등 미약하나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장이나 소득보장을 위한 움직임과 함께 1980년대에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특별한 사회보호와 건강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전반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 결과 1987년에 재가노인복지 관련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가정봉사원과견사업, 노인상담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었다.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인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노인복지법 제정의 취약점이라면 노인복지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약화된 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안보의 논리에 묻혀 노인복지 문제가 큰 관심을 이끌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에 기반하여 사적(私的)부양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노인을 빈곤에서 분리된 독자적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책적 위상을 갖는 듯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생활보호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현외성, 2001).

2) 1990년대

1990년대는 노인복지의 법적 근거 하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제도의 발전기라고 일컬을 수 있다(박차상 외, 2005).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1990), 노인복지계가 노인복지과로 확대·개편(1990),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1991)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1993년 노인복지법 2차 개정으로는 재가복지 및 유료노인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의 시범사업 실시 이후 1990년대에 확신을 가지고 재가노인복지를 더욱 추진하게 된 것은 시설보호의 폐단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 재가보호라는 큰 흐름을 주도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였다.

노인복지법 3차 개정(1997년)을 통해 경로연금제가 도입되었고, 치매·중풍 등 만성 질환 노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대처하고자 하였고, 연금적용이 안 되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지원, 취업 활성화,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개편 등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세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노인복지법 개정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1990년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노인복지사업이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규정되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형태를 갖추게 된 시기였다. 노인시설의 유형이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된 시기이기도 했다.

3) 2000년대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노인복지제도의 성숙기라고 칭할 수 있는 시기이다(박차상, 2002). 2000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

로 진입한 시기였다. 이 시기 노인복지 정책상의 특징이라면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큰 틀 마련,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일부 노인복지사업(13사업)의 지방이양을 들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999년 노인보건과의 신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비용 면에서나 노인 욕구의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면에서나 가장 효율적인 복지대책으로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구축에 주력한 시기가 이때이다. 본격적 준비는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로써 노인을 위한 국가대책은 복지와 보건을 함께 고려한 보건복지의 종합적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고, 200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실버산업(현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노인소득 지원 및 고용촉진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2004년에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노인학대방지, 노인보호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 조치사항 규정 등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모선희 외, 2006).

노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재정자립도가 각기 다른 지방정부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노인복지의 축소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그동안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던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을 갖게 함으로써 재원조달 및 사업운영 등 여러 면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지방정부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05년은 노인복지의 전환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기존의 공적 노인복지정책이 국가에 의해 한층 강화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빈곤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중산층 노인의 욕구에도 관심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민간 시장경제에 의한 노인복지, 고령친화산업정책을 활발히 추진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저출산·고령화현상에 동시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수차례 단행하였다.

먼저 노인이 적합한 일자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관련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였다.

2005년 7월 1차 시범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이 완료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빠른 고령화, 노인에 대한 사적 부양체계의 붕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변화와 맞물려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세대들의 본격적 은퇴가 시작됨으로써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 노인집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수요예측 역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제1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07-11)을 수립해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2007년 시행된 ‘노인돌봄미바우처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은 2009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되며 명칭이 변경되었고, 9개 지자체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사업이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치매 조기 검진 확대, 종합적인 치매 치료 및 관리,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 부담의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제1차 치매 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어 1991년 도입되었던 노령수당(1988년 경로연금)은 폐지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시작 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를 대상으로 약 8만 4천원을 지급했다가 같은 해에 만 65세 이상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하위 70%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금과 서비스 수혜대상 노인의 연령은 만 70세로 규정했으나, 2008년 기초노령 연금의 지급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낮추었다는 점이다. 이때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조기퇴직으로 인해 수입 없이 연금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빈곤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10년~현재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 변화 및 학계의 동향을 보면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기 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수정이나 방향 모색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이 발표되었는데, 노인중심의 계획에서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인 베이비부머를 새로운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제로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그리고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목표로 이루어졌다.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12-16), 제3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17-21)은 더 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3년에는 정년을 60세로 법제화시켰다. 또한 제1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13-17)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18-22)은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및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해당 계획들은 노인의 사회참여, 부정적 이미지 완화, 그리고 장년의 노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13년에는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13-15)이 발표되어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목표로 했다. 2014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매 특별 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환자 진단·치료·돌봄,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연구 통계 및 기술을 통한 지원을 목표로 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을 발표했고, 2017년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1:1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의료지원 강화, 의료비 대폭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제1차 독거노인종합대책(12-16)을 발표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안전 확인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돌봄(Care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Care By the Community)”이 핵심 요소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노인돌봄사업의 통합개편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그동안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진 노인돌봄사업이 2021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되었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총 6개였다. 이러한 노인돌봄사업은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로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노인복지 분야에서 보여 온 법과 정책, 제도상의 발전상을 살펴보았다. 근 4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한국사회가 노인복지를 위해 보여 온 발전상은 매우 신속하고 다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급속한 증가율과 사회변화상을 고려하면 여전히 노인을 위한 복지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보면 기초육구의 보장에서 부차적 육구, 미분화된 대응에서 전문화된 대응, 문제해결 방법의 다양성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개입의 시기와 각종 노인복지 조치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의 대응책에 대한 노인복지법상의 규정 마련은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부담 최소화 노력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다.

2. 노인복지분야의 연구 동향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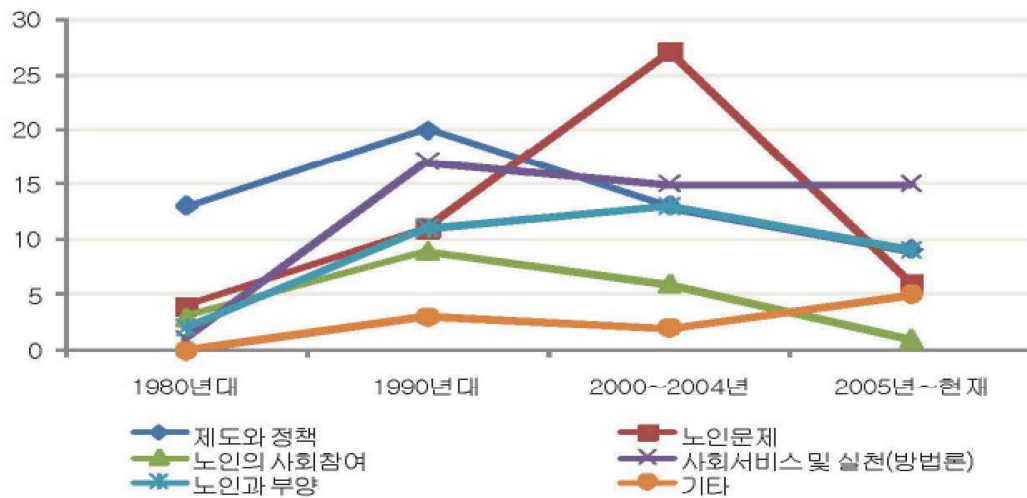
김미혜(2008)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30년간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복지분야 논문 215편을 대상으로 하여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등의 시기상으로 구분하여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노인복지의 도입기로 노인문제나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과 주류를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인하여 제도, 정책, 서비스 및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2000년대에는 노인 학대, 삶의 질 및 성공적 노후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2000년 후반기에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1980년 시작된 노년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08년의 28권 제2호에 이르는 복지 분야의 논문 215편 중 가장 빈번하게 채택된 연구 주제는 제도와 정책으로서 55편(25.6%)이었으며, 다음이 노인문제와 사회서비스 및 실천(방법론)에 관한 주제로서 각각 동일하게 48편(22.3%)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의 부양관련 문제 35편(16.3%), 노인의 사회참여 19편(8.8%), 기타 10편 (4.7%) 순으로 연구경향을 보였다(<표 1> 참조).

<표 1> 1980-2007년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동향(편, %)

범주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4년	2005-2008년	합계
제도와 정책	13	20	13	9	55
	(6.0)	(9.3)	(6.0)	(4.2)	(25.6)
노인문제	4	11	27	6	48
	(1.9)	(5.1)	(12.6)	(2.8)	(22.3)
노인의 사회참여	3	9	6	1	19
	(1.4)	(4.2)	(2.8)	(0.5)	(8.8)
사회서비스 및 실천	1	17	15	15	48
	(0.5)	(7.9)	(7.0)	(7.0)	(22.3)
노인과 부양	2	11	13	9	35
	(0.9)	(5.1)	(6.0)	(4.2)	(16.3)
기타	0	3	2	5	10
	(0)	(1.4)	(0.9)	(2.3)	(4.7)
합계	23	71	76	45	215
	(10.7)	(33.0)	(35.4)	(20.9)	(100)

4) 노인복지분야의 연구 동향은 「한국노년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한국노년학」은 1980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제43권 5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인구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각 계의 학자들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개진해 오고 있다. 「한국노년학」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연 1회 발간되었고, 1991년-1996년에는 연 2회, 1997년-2002년에는 연 3회, 2003년-2019년에는 연 4회, 2020년부터 연 6회 발간되고 있다.



[그림 1] 시기 및 범주별 복지 분야 연구동향(1980-2007)

시기별로는 [그림 1] 에서 보듯이 1980년대의 경우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1990년대의 경우에는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가 더욱 증가한 가운데 거시적 접근을 벗어나 미시적, 직접적 실천 방안으로서의 사회서비스 및 실천(방법론)에 관한 연구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사회변화에 맞물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2000년~2004년에는 다양한 경향을 띠게 되었고 특히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는 어느 한 분야에의 두드러진 집중보다는 기존의 평균적인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1980년대의 노인복지 분야 연구동향

1980년대에는 제도와 정책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아 23건의 연구 중 총13편(57%)을 차지하고 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한국 사회에서도 본격적인 노인복지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열리자 이에 대비하여 서구사회의 노인복지 제도와 정책에 관한 소개,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문제점,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문헌연구가 많아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제도와 정책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특징, 대책 등을 개론적으로 읊는 경향이 강하며, 의료보험과 국민복지연금 등 노인을 위한 일차적인 보장으로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의식주의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자 노인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연구도 많아졌고(4편, 17%),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서 여가활동이나 지역사회참여 등 노인의 사회참여(3편, 13%)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반면, 노인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초창기여서 사회서비스나 실천(방법론)은 여러 면에서 아직 미숙하여 노인정에 관한 단 1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2) 1990년대의 노인복지 분야 연구동향

1990년대의 특징은 복지 분야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양적 증가였다. 1980년대에 총 23편의 연구가 행해진 것에 비해, 1990년대는 총 71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각 범주에 속하는 하위주제에 대한 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져 내용상으로도 풍부해졌다. 범주별로는 역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아서 71편의 논문 중 20편(28%)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및 실천(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17편(24%), 노인문제 11편(16%), 노인과 부양 11편(16%), 노인의 사회참여 9편(13%)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모든 범주에서 1980년대에 비해 양적, 질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의 1편에서 1990년대 17편으로 늘어난 사회서비스 및 실천(방법론)에 관한 연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하위주제 중에서는 가정봉사원서비스나 주간보호·단기보호 등 재가복지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인 재가보호가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재가복지센터의 도입과 함께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재가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한 법제의 확립과 시설기반의 마련,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하는 시기였으므로 재가노인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등의 실천방법과 내용에 관한 연구주제들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노인의 부양에 관한 연구도 1980년대 2편에서 1990년대 11편으로 많아져 사회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시기였음을 엿볼 수 있다. 노인문제 중에서는 특히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3) 2000년~2008년의 노인복지 분야 연구동향

2000년~2004년에는 더욱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19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총 71편) 만큼이나 많은 연구(총 76편)가 2000년대의 상반기 중에 수행되었다.

범주별로는 노인문제 관련 연구가 27편(36%)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및 실천(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15편으로 20%를 차지하였다. 반면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13편(17%)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6편)나 사회서비스 및 실천(방법론)다음으로는 노인의 취업과 장기요양에 관한 주제들이 다수 연구되었다.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인의 은퇴 후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 및 인력활용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5년에서 2008년 현재까지는 총 45편의 연구가 행해졌고, 범주별로는 사회서비스

및 실천(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15편으로 3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제도와 정책 연구와 노인과 부양에 관한 연구가 각각 9편(20%)씩 이었고, 노인문제 연구가 6편(13%), 노인의 사회참여 연구가 1편(2%)이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2000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작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학자 간에 많은 관심을 공유하게 되었다. 치매와 중풍노인이나 독거노인, 노인 자원봉사, 치매예방 및 노년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이용과 만족도 등 대상별, 서비스별로 세분화된 연구는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복지 분야의 점진적 발전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에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사실과 노인인구 중에서도 후기노인 인구가 급증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하나의 집단으로서 총체적 노인을 고려하던 과거의 시각을 벗어나 노인집단도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수준에 따라 계층화함으로써 그에 맞는 제도와 서비스를 고려할 만큼 발전한 것이다.

4) 2008년~2017년의 노인복지 분야 연구동향

허준수 등(2018)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노인복지 논문 273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론 등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연구실태 및 연구동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복지 연구주제별 분류를 다음과 같이 5가지 분야로 구분했는데 게재 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문제(151편, 52.6%); 2) 노인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38편, 13.2%); 3) 노인복지서비스(28편, 9.8%); 4) 노인복지이용시설·생활시설(39편, 13.6%); 5)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31편, 10.8%).⁵⁾

첫째, ‘노인문제’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들의 총 편수는 151편으로 전체 복지분야 논문들의 52.6%를 차지하였다. 노인문제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노인들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총 26편)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총 13편), 공식적 돌봄 영역(총 13편), 비공식 돌봄인 가족 돌봄 영역(총 12편), 노인빈곤(총 8편), 베이비부머(총 7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논문들은 총 38편(13.2%)이었다. 노인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세부영역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8편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 제도·정책(4편), 국민연금(4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편) 순이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연금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서 지난 10년간 동안 다양한 제도관련 이슈와 문제점들이 논의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5) 이 연구의 복지분야 분석 대상 논문은 총 273편이나 “연구주제별” 분석 시 14편의 논문들이 두 개 영역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연구주제별” 분석대상 논문은 총 287편으로 분석하였다.

〈표 2〉 2008-2023년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동향(편, %)

노인복지 분야 연구주제 구분		2008-2017 (총 287편)	2018-2023 (총 243편)	총복포럼(99-21) (총 19편)
1) 노인문제	빈곤	8 (5.3)	3 (1.9)	—
	고용·경제활동	3 (2.0)	7 (4.5)	—
	퇴직·정년	8 (5.3)	4 (2.6)	—
	학대·인권	9 (6.0)	7 (4.5)	—
	건강	6 (4.0)	6 (3.9)	2 (28.6)
	심리정서·정신건강	26 (17.2)	21 (13.5)	1 (14.3)
	치매		11 (7.1)	—
	죽음·웰다잉		9 (5.8)	—
	공식적 돌봄	13 (8.6)	4 (2.6)	—
	비공식 돌봄(가족돌봄)	12 (8.0)	8 (5.2)	—
	여성노인	9 (6.0)	3 (1.9)	—
	독거노인	7 (4.6)	7 (4.5)	—
	농촌노인	7 (4.6)	2 (1.3)	1 (14.3)
	장애노인	3 (2.0)	—	—
	조손가정	6 (4.0)	—	—
	베이비부머·노후준비	7 (4.6)	7 (4.5)	—
	삶의 질·생활만족도	13 (8.6)	21 (13.5)	1 (14.3)
	신뢰·사회적 자본	—	7 (4.5)	—
	연령주의·차별	—	10 (6.5)	—
	기타	14 (9.3)	18 (11.6)	2 (28.6)
	합계	151 (100)	155 (100)	7 (100)
2)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 제도·정책	4 (10.5)	9 (52.9)	5 (83.3)
	국민기초생활보장	2 (5.3)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8 (73.7)	6 (35.3)	1 (16.7)
	국민연금	4 (10.5)	—	—
	기초연금	—	2 (11.8)	—
	합계	38 (100)	17 (100)	6 (100)
3)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사회참여	14 (50.0)	2 (25.0)	—
	노인돌봄서비스(종합·기본/맞춤)	4 (14.3)	2 (25.0)	—
	노인복지서비스	8 (28.6)	4 (50.0)	2 (100)
	기타 서비스	2 (7.1)	—	—
	합계	28 (100)	8 (100)	2 (100)
4)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21 (53.8)	7 (33.3)	1 (50.0)
	주야간보호	4 (10.3)	2 (9.5)	—
	방문요양	5 (12.8)	4 (19.0)	—
	노인복지관	6 (15.4)	1 (4.8)	1 (50.0)
	경로당	1 (2.6)	3 (14.3)	—
	일자리전담기관	—	2 (9.5)	—
	주거복지시설	2 (5.1)	2 (9.5)	—
	합계	39 (100)	21 (100)	2 (100)
5) 사회참여활동	사회활동	18 (58.1)	6 (31.6)	—
	교육활동	3 (9.6)	2 (10.5)	—
	여가활동	2 (6.4)	7 (36.8)	—
	봉사활동	7 (22.6)	4 (21.1)	2 (100)
	종교활동	1 (3.2)	—	—
	합계	31 (100)	19 (100)	2 (100)
6) 디지털, AI, IoT	로봇·소셜로봇(효돌이)	—	5 (22.7)	—
	ICT 기반 돌봄보조 기기	—	6 (27.3)	—
	휴대폰·스마트기기·인터넷	—	11 (50.0)	—
	합계	—	22 (100)	—

〈표 3〉 충북사회복지포럼 노인복지 분야 발표 현황

회차	일 시	발 제 자	주 제
6	1999.10.1.(금)		21세기 바람직한 노후생활
22	2004.6.9.(수)	최혜지(건국대학교)	충주지역 고령인구의 복지현황 및 정책적 함의
23	2004.9.10.(금)	한규량(청주과학대)	현행 장묘 문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27	2005.10.26.(수)	김창기(청주과학대)	농촌 노인복지의 실태에 관한 연구
36	2008.3.25.(화)	조추용(꽃동네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문인력 양성 실태 및 개선방안
38	2008.9.25.(목)	이수한(꽃동네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노인의 건강실태와 건강불평등 해소방안
51	2011.11.28.(월)	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적 접근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56	2012.10.19.(금)	김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충북 노인복지를 위한 역량강화 논의와 방안
60	2012.12.6.(목)	김윤(광주보건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내부 마케팅을 통한 서비스 경영
62	2013.2.27.(수)	이미진(건국대)	노인복지실천에서 서비스 질의 갈등을 풀다
67	2013.10.25.(금)	유성종 (전 충청북도교육감)	노인복지시설 근무자의 전문성 지향
68	2013.11.5.(화)	박홍재 (뉴질랜드오클랜드대)	뉴질랜드 노인복지의 현실과 과제
72	2014.5.13.(화)	성규탁 (한국효사상연구소)	새 시대의 효 : 전통-변화-적응
73	2014.10.30.(목)	심의보(충청대)	퇴직 전문가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80	2014.12.29.(월)	성웅경(서원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생활 관리 방안
81	2014.12.29.(월)	심의보(충청대)	고령화 사회의 성공적인 노화 -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
88	2017.11.23.(목)	조추용(꽃동네대)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고독감이 노인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94	2019.11.29.(금)	조추용(꽃동네대)	커뮤니티 케어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의 모델 연구
95	2021.11.26.(금)	윤호종(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노인복지관의 역할

셋째, 노인복지관련 사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총 28편(9.8%)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영역에 포함되는 세부영역들은 노인일자리사업·사회참여(14편), 노인복지 서비스(8편),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4편), 기타 서비스(2편) 등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넷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분석에 포함된 논문 총 39편 중 30편이 노인장기요양 관련 기관들로 대다수의 연구들이 요양시설(21편)에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이외에도 주야간보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실제 이용 공간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경로당(1편)과 노인종합복지관(6편)에 관한 논문은 상당히 적었다.

다섯째, 노인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31편으로 전체 복지분야 논문들의 10.8%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이 참여하는 복수의 사회활동을 사회참여로 조작화한 논문이 18편(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봉사활동 7편(22.6%), 교육활동 3편(9.6%), 여가 활동 2편(6.4%), 종교활동 1편(3.2%) 순으로 나타났다. 김미혜(2008)가 분석한 창간호(1980년)부터 2008년(28권 2호)까지 게재된 복지 분야의 논문 215편들 중에서 사회참여 논문이 8.8%(19편)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10년 동안 사회참여가 복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이 높아졌다.

5) 2018년~2023년의 노인복지 분야 연구동향

2018년 이후의 노인복지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을 위해 2018년(한국노년학 제38권 1호)부터 현재(한국노년학 제43권 5호)까지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노인복지 논문 243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노인복지 연구주제별 분류를 다음과 같이 6가지 분야로 구분했는데 게재 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문제(155편, 63.8%); 2) 노인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17편, 7.0%); 3) 노인복지서비스(8편, 3.3%); 4) 노인복지이용시설·생활시설(21편, 8.6%); 5)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19편, 7.8%); 6) 디지털·AI·IoT(22편, 9.1%)

이 시기와 2008년~2017년의 노인복지 분야 연구동향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AI·IoT 관련 논문이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다는 점과 노인문제 연구의 증가, 그리고 이를 제외한 분야의 연구가 감소한 점이다.

첫째, ‘노인문제’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들의 총 편수는 155편으로 전체 복지 분야 논문들의 63.8%를 차지하였다. 노인문제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심리정서적 측면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41편)로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치매와 죽음·웰다잉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21편), 연령주의·차별 영역(10편), 비공식 돌봄인 가족 돌봄 영역(8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논문들은 총 17편(7.0%)으로 이전 시기(13.9%)보다 감소했다. 노인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의 세부영역들은 노인복지 제도·정책(9편) 영역 연구 가장 많은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는 기존 28편에서 6편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연구(2편)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상당히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기인한다.

셋째, 노인복지관련 사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총 8편(3.3%)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이전 시기(10.3%)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영역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4편), 노인일자리사업·사회참여(2편), 노인돌봄(종합·기본·맞춤)서비스(2편) 순으로 많았다.

넷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분석에 포함된 논문 총 21편 중 노인장기요양 관련 기관들이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경로당(3편)과 일자리 전담기관(2편)에 관한 연구의 증가와 노인종합복지관(1편)에 연구의 감소였다.

다섯째, 노인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19편으로 전체 복지 분야 논문들의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 여가활동 논문이 7편(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활동 6편, 봉사활동 4편, 교육활동 2편순으로 나타났다. 허준수 등(2018)이 복지 분야의 논문 273편들 중에서 사회참여 논문이 10.8%(31편)이었던 것에 비하면 사회참여가 복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감소했다.

여섯째, 1980년-2007년(김미혜, 2008)과 2008년-2017년(허준수 외, 2018) 시기에 노인 복지 분야 연구동향 분석에서 연구주제로 분류하지 않았던 디지털·AI·IoT(22편) 관련 연구는 22편(9.1%)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로봇, 핸드폰, 인터넷 관련 영역이 노인복지 연구에서 새로운 관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연구가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000년~2008년까지는 노인 학대, 노인장기요양제도, 성공적 노후,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복지감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으나, 이원지(2008)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에는 노인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등급판정, 방문 및 재가복지, 시설, 보호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내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창출된 직업군인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 노인문제의 연구 영역은 세분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치매, 죽음·웰다잉, 사회적 자본, 연령주의·차별, 다양한 종류의 노인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기초연금, ICT 관련 연구들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4.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 규모 증가, 그리고 수명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고령화율은 16.6%,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857만 1천 명이며, 2025년에는 고령화율 20.6%, 노인인구 수 1,058만 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대수명은 2020년 83.5세에서 2025년 84.7세로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통계청, 2021).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 보건의료·노인복지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한 노인의 절대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즉,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인해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에 따라서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다.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이상 노인들은 서로 다른 복지욕구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는 2020년부터 65세 노인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해 2028년에는 전체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된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인 세대 진입은 지금까지의 의존적이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특성을 감소시키고, 자립성을 확대하며, 노후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노인 특성의 변화는 노인의 소득, 건강,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전 노인과 비교해 건강과 소득 수준에서 괄목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전의 전기 노인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현상,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이윤경 외, 2020). 또한 노인 세대 내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의 특성에서 다양성과 양극화가 나타나 정책적 대상으로 유형이 세분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년기 다양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점, 소득보장과 건강, 첨단기술 보조장비의 활용, 그리고 노인돌봄과 여가 영역을 중심으로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김준환 외, 2022).

1) 노인복지에 대한 관점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 욕구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가의 정책 개입만으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들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연금을 개혁하며,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욕구에 대처해 나간다면 하더라도, 이러한 노인정책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종래의 정책적 개입들은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 보호를 수동적으로 받아야 할 존재, 무능력한 존재라는 암묵적 가정과 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사회적 맥락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의 증가는 젊은 근로자의 세금과 복지비 부담의 증가로 인식되고, 약해져 가는 사람들의 보호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국가 급여에 수동적으로 의존해 가는 비생산적 사람들의 증가로 이해되어졌다. 따라서 고령화는 정치·경제·사회에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서구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하여 노인정책 요소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인식이란 노인을 정책적 개입의 수동적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능동적 사회참여자로서 전환하는 사고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은 ‘능동적 고령화(active aging)’, ‘적극적 고령화(positive aging)’ 또는 ‘생산적 고령화(productive aging)’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Biggs, 2001). 또한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국제연합(UN)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적 기구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사고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노인정책이 단순히 노인들만을 위한 정책개입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단지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즉, 노인들을 위한 사회는 전체 사회의 발전 속에서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사회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정책은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고령화, 근로, 은퇴, 교육,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른 노인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고령화 과정은 반드시 의존성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고령화와 의존성 증가는 생물학적으로도 확실히 결정된 과정이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존성 증가의 상당 부분은 사회가 인위적으로 창출된 것이다. 고령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교육에 대한 고용주의 선입관, 강제적인 은퇴, 고령에서의 근로를 좌절시키는 사회보장제도, 신체적 기능 장애를 감소시키는 환경조건의 조성 미비,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기회의 제한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어쩔 수 없는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인위적 환경을 제거하고 노인들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할 때, 초고령 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후소득보장정책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은 0층인 기초연금, 1층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2층인 퇴직연금, 3층인 개인연금과 주택·농지연금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현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 대상 규모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아직 아쉬운 수준이다. 가장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의 경우 수급률이 44.6%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 중 6.4%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70%가 지급 대상으로 2023년 현재 323,180원이 지급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이다.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급여의 수급을 통해 빈곤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정부도 적극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 개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노후소득의 적절성은 낮다. 이에 더해 여자 노인의 빈곤율이 남자 노인에 비해 높고,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노인 내의 형평성이 낮은 상황이다.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과제로 무엇보다 절대빈곤노인의 감소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급여수준 인상(장기적으로 대상자는 축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직 이후 건강하고 오래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기에,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한 창업 및 자활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노인의 생계보장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철폐를 포함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 중심의 제1차 안전망, 연금제도의 개선 및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기반한 제2차 안전망, 긴급상황을 대비한 긴급복지지원 및 긴급의료지원과 같은 급여로 구성된 제3차 안전망으로 체계의 노인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3) 노인건강정책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 노년기의 9.4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고 있다. 기대수명이 2015년 기준 81.3세이지만 건강수명(WHO 기준)은 73.0세로 8.3년을 건강하지 못하게 지내고

있어 앞으로 질병과 장애로 인한 의료비, 복지비 등의 부담이 증가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노인외래정액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의료비 지원의 충분성은 제고되어 왔지만 비합리적 의료 이용이 노인 진료비 급증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과 의사 인력 등 보건의료 자원은 비교적 충분성이 제고되었으나 아직 노인의 59.7%가 노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증대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의료 자원의 증가가 곧 노인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를 반영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계속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 노인건강정책을 살펴보면, 노인의 욕구에 기초한 체계적인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2013년부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포괄 보조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존 인력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오영아, 2015). 한편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 이용 형평성과 건강불평등이 크다는 평가와 공공 의료기관의 지역별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정경희, 2017).

현재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체계는 급성질환 중심의 사후적 치료중심으로, 노인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과도한 실정이다. 한편 의료급여제도의 경우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에 있어 건강보험과의 차이가 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속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에게 기초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건강취약 노인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와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노인의 건강정책은 이용자 중심의 시각과 예방적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세밀화하고, 인력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통해 적절성을 제고해 가야 할 것이다. 주치의 제도 도입 방안 마련 등은 이용자 중심의 원칙과, 지역사회에서의 조화가 가능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4) 첨단기술 보조장비의 활용

코로나19의 경험은 대면서비스 위주로 제공되었던 복지서비스를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돌봄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 AIP)’가 확산하면서 적극적 사회참여자로서 노인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거주지 내에서 건강하고, 활동적 노인의 독립적 삶을 지원해 주는 한편, 돌봄 보조장비 보급·확산이 이루어지며 첨단기술 보조장비가 주목받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조장비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기술의 개발과 보급, 현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로봇, 가상증강현실(Augmented/Virtual Reality, AR/VR) 등은 노인의 자립적 생활을 돕고, 독거노인의 사회적 소외, 고립을 완화해 주며 가족을 포함한 돌봄제공자의 돌봄과 관련한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 매우 큰 직종으로, 첨단기술 보조장비를 활용하면 돌봄대상자의 체위 변경, 이동 부축 같은 동작 시 신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장비의 사용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적용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로 이용률이 낮고 시범사업 수준의 소극적인 정책만 시행되고 있다. 특히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보조장비를 보급·지원하는 사업은 찾기 어렵다. 아직은 첨단장비 보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첨단기술 보조장비 사용으로 얻어지는 수많은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미흡한 실정이다(윤민석 외, 2021).

현재 돌봄분야에서 예산지원이 가장 큰 영역은 돌봄로봇 분야이다. 첨단기술 활용 보조장비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에서 진행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조장비 보급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단기술 보조장비 보급과 더불어 실사용자의 노인과 요양보호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디지털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정책 중 최근 집중적 관심을 받으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을 중심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돌봄서비스(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그 외의 지역사회 단위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노인복지관이나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최근 노인돌봄 정책은 돌봄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분절성을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비롯하여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등 사업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노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유사·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고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노인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치매 환자’에 대한 정책은 2018년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를 통해 치매 관리 정책의 전담 인프라인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하여 치매 환자 돌봄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치매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지난 몇 년간의 노인돌봄 정책 확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0년 85만 8천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은 45만 명으로 130만 8천 명의 노인이 공공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급여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는 전체 노인의 약 15.4% 규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보건복지부, 2020). OECD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비율은 65세이상 노인인구 대비 재가는 10.7%, 시설은 3.8%로 총 14.5%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서비스 수급자 규모는 상당 수준의 성장 결과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그러나 노인돌봄 수급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은 돌봄서비스의 급여 다양성 및 급여량 부족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이용이 촉진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또는 노인끼리만 거주하는 부부 노인 가구 형태가 확대되지만 현재의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에서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및 돌봄서비스는 이들의 돌봄 필요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서비스양(시간)과 이동 서비스나 식사 서비스, 야간 또는 수시 대응 서비스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인하여 재가 거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을 통한 사회적 입원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과 시설 침상은 60.4개로 OECD 평균 45.6개와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관리 인프라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치매안심센터 사업은 조기 검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증 치매 환자는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제공되지만,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의 치매 전문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증가는 노인돌봄 정책에서 보장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노인돌봄 정책에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또는 aging in community)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반의 노인돌봄 강화’와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와 돌봄제도의 역할 정립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우선, 지역 기반의 노인돌봄 강화 정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대한 급여량 확대와 급여 제공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요양 필요량이 높은 1~2등급의 월 급여 이용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이용수가 수준으로 높이고, 방문요양의 1일 1회 장시간(2~3시간) 방문 방식을 1일 다회 단시간 방문 방식으로 전환하며, 수시 및 야간 방문요양을 도입하여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이동 서비스, 식사·영양 서비스, 주택 개보수 서비스 등의 새로운 재가급여를 도입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재가에서 거주하는 것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며, 복지 용구 확대를 통해 도구를 통한 자립적 돌봄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직접적 재가 서비스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장기요양보험으로 조기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며, 대상자 선정에서는 소득 수준을 없애고 누구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은 치매안심센터의 지역 사회 코디네이터 기능으로서,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치매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력에 치매 돌봄 전문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치매 전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노인 돌봄의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 복지제도 간 대상자와 역할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 총비용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되, 병원에서 재가로 복귀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역 단위 노인돌봄 정책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노인여가활동 지원 정책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노인에게 특화된 사업을 개발, 수행 중이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지방 문화원에서는 2005년부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참여자 중에서도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89.8%의 노인이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고, 43.1%가 평생학습활동 참여를 희망하고(현재 참여율 11.9%), 45.6%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현재 참여율 2.9%). 즉, 충분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기노인에게서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다(이윤경 외, 2020). 따라서 전반적인 문화·여가활동 기회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이들 노인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낮은 인프라 분포로 인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성별 차이와 소득 수준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불충분성과 낮은 적절성 문제는 공적 영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간의 역할이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 또 현재 정책 개발이 부처별로 이루어져 정책이나 인프라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수요자인 노인의 욕구에 맞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편향된 노인의 여가활동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에 의한 것인 측면도 있다.

나오며

본 연구는 노인복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논문 주제와 연구방법을 분석하고 노인복지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 한국노년학 창간 이래 2023년 현재까지 한국노년학에 실린 복지 분야의 논문들을 분석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한국노년학에서 복지분야 연구가 담당할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출간된 복지 분야의 논문 215편, 2008년-2017년 논문 273편, 218년-2023년 243편을 분석하였다.

시기상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1980년대는 한국사회의 노인복지 분야가 도입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므로 연구 수 자체가 매우 한정된 가운데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를 밝히거나 국내외의 제도를 소개하는데 주력한 시기였다.

둘째, 1990년대는 노인복지사업이 다양화한 시기로서 연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주제나 연구방법상의 발전이 있었고, 제도와 정책 외에 사회 서비스 및 실천(방법론)에 관한 논의도 크게 증가한 시기였다.

셋째, 2000년~2008년에는 연구 수,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이 더욱 세분화하였고, 노인 학대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였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기 시작하여 성공적 노후,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복지감 등의 주제가 큰 관심을 받고 연구되었다.

넷째, 2008년부터 2017년에 게재된 노인복지 연구주제는 5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① 노인문제(151편, 52.6%), ② 노인복지제도 및 정책(38편, 13.2%), ③ 노인복지서비스(28편, 9.8%), ④ 노인이용시설 및 생활시설(39편, 13.6%), ⑤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31편, 10.8%).

다섯째,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 연구동향은 연구주제의 세분화·다양화되었고 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와 중단연구의 증가, 메타연구와 혼합연구 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노인복지 연구주제별 분류를 다음과 같이 6가지 분야로 구분했는데 게재 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문제(155편, 63.8%); 2) 노인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17편, 7.0%); 3) 노인복지서비스(8편, 3.3%); 4) 노인복지이용시설·생활시설(21편, 8.6%); 5)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19편, 7.8%); 6) 디지털·AI·IoT(22편, 9.1%)

앞으로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작한 정책이 아니어도 정책 대상자 중 노인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관련 정책이 다양한 연령 구성 - 구체적으로는 노인 - 에 충분한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기존 정책의 인력, 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 전달 방법 등의 고령 친화성을 점검해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및 프로그램이 개발·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체계구축에 기초하여 교육-여가-취업-소득보장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인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체계(Community Care)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양질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연령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정책과 제도가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청년기,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라는 엄격한 구분에 기초한 연령 분리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구성은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연령에 따른 교육, 일, 여가의 구분 체계에 기초한 것으로 고령화시대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 구성 원리가 아니다.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동안 교육, 일, 가족 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 체계로 변화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연령으로 인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연령 유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령 다양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확산이 요구된다(정경희, 2017).

이러한 정책적 과제들이 실현될 때 노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노인 개개인도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김미혜(2008), 한국노년학의 복지 분야 연구동향: 1980년(창간호)부터 2008년(28권 제2호)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8권 4호, pp. 725-744.
- 김준환 · 김수정 · 오정아 · 이명희 · 이민표 · 이원지 · 장우심 · 허윤정(2022), 노인복지론, 어가.
- 모선희 · 김형수 · 유성호 · 윤경아(2006),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 박차상(2002), 노인복지론,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OECD Health Statistics.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소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오영아(2015), 지역사회 건강검진인력 직급별 핵심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보건연구,
41(1), pp. 96-106.
- 윤민석 · 윤혜정 · 임상욱(2021), 첨단기술 보조장비를 활용한 서울시 복지서비스 고도화
실행방안, 서울연구원.
- 이윤경 · 김세진 · 황남희 · 임정미 · 주보혜 · 남궁은하 · 이선희 · 전경희 · 김은나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7),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 12., pp. 18-35.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전국기준).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허준수 · 김찬우 · 이민홍(2018), 한국노년학의 사회복지분야 연구동향 분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노년학 제38권 3호, pp. 725-744.
- 현외성(2001), 한국노인복지법의 형성과 변천과정, 노인복지연구, 2001, 겨울호, pp. 67-99.
- Biggs. Simon.(2001). “Toward Critical Narrativity Stories of Aging In Contemporary
Social Policy.” *Journal of Aging Studies* 15, pp. 303-316.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현황 (1회~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현황(1회~100회)

회차	일시	장소	발제자	주제	공동주관	비고
1	1999.4.2.(금)	청주대학교	표갑수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2	1999.4.27.(화)	청주예술의전당		충북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대책		
3	1999.5.12.(수)	청주예술의전당	김상해	저소득층의 복지욕구와 지방정부의 지원대책		
4	1999.6.25.(금)	청주예술의전당	황성동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전략		
5	1999.8.13.(금)	청주대학교		21세기 사회복지의 도전		
6	1999.10.1.(금)	청주대학교		21세기 바람직한 노후생활		
7	1999.11.29.(월)	충북도청		충북사회복지 5개년 종합계획		
8	1999.12.15.(수)	청주예술의전당	전광현	21세기 사회복지시설의 나아갈 방향		
9	2000.4.28.(금) 14:00	청주대학교	표갑수(청주대학교)	충북자원봉사체계의 통합관리 방안		
10	2000.5.17.(수) 14:00	청주예술의전당	윤혜미, 유경희	충북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11	2001.3.21.(수) 10:30	현대부페	표갑수(청주대학교)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12	2001.10.10.(수) 14:00	청주대학교	허 선(순천향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13	2002.5.2.(목) 14:00	청주대학교	김형식(한국재활복지대학) 김종인(나사렛대학교)	장애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재활시설의 발전방안		
14	2002.5.21.(화) 14:00	청주대학교	장영인(천안대학교) 김창기(청주과학대학교)	대우공동산 중단기 발전계획		
15	2002.9.6.(금) 14:00	청주대학교	전광현(서울신학대학교)	일본사회복지의 기초구조 개혁		
16	2002.11.8.(금) 18:00	청주대학교	이은주(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표갑수(청주대학교)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행정공무원의 역할		
17	2003.3.25.(화)	청주대학교	스나가 스스무(아키쿠사학원단기대학)	일본의 보육현황과 향후의 과제		
18	2003.6.19.(목)	상당구청	전광현(서울신학대학교)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자원봉사 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19	2003.11.12.(수)	청주시청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과제와 전망		
20	2003.12.19.(금)	청주대학교	표갑수(청주대학교) 김영임(방죽여린이집)	푸드뱅크 사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		
21	2004.5.3.(월) 15:00	청주대학교	한혜빈(서울신학대학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토		
22	2004.6.9.(수) 14:00	충주시청	최혜지(건국대학교)	충주지역 고령인구의 복지현황 및 정책적 함의		
23	2004.9.10.(금) 14:00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한규량(청주과학대학교)	현행 장묘 문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24	2004.12.3.(금) 18:00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방화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25	2005.4.1.(금)	청주대학교	표갑수(청주대학교)	충북도내 사회복지근무자의 처우개선 방안		
26	2005.6.3.(금)	청주대학교	김영석(북부종합사회복지관) 이화정(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설희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유철식(충남연기자활후견기관)	학교폭력의 원인·현황 및 대책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안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과 불평등개선 자활사업의 현황과 제도개선		
27	2005.10.26.(수)	영동문화관	김창기(청주과학대학교)	농촌 노인복지의 실태에 관한 연구		
28	2005.12.8.(목)	제천 유유예식장	송정부(상지대학교)	지역주민통합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		
29	2006.4.26.(수)	청주대학교	김현진(서울기독대학교)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제3의길과 NHS 개혁		

30	2006.9.2.(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김통원(성균관대학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1	2006.11.28.(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정영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단위 사회복지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T 활용방안		
32	2007.3.29.(목)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나동석(청주대학교)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33	2007.6.21.(목)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박현순 외 2명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역량강화		
34	2007.10.15.(월)	청주교육대학교	표갑수(충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과제		
35	2007.12.18.(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장영인(한라대학교)	교육복지 실태 및 발전방향		
36	2008.3.25.(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조주용(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문인력 양성 실태 및 개선방안		
37	2008.7.29.(화)	제천 유유예식장	유용식(세명대학교)	여성결혼이민자실태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38	2008.9.25.(목)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수한(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노인의 건강실태와 건강불평등 해소방안		
39	2008.12.8.(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김영석(북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과정을 통해 본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방안		
40	2009.3.26.(목)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개요 및 파급효과 분석		
41	2009.9.23.(수)	청주대학교	김현진(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자원봉사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42	2009.11.12.(목)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용재(호서대학교)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연계 발전 방안		
43	2009.12.18.(금)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김선숙(충주대학교) 김은경(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김현진(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나동석(청주대학교) 박미정(대원과학대학교) 박 영(충북도립대학교) 엄용섭(부활원) 진옥분(용암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습체계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집담회		
44	2010.3.30.(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임숙영(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45	2010.5.19.(수)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박인석(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		
46	2010.10.14.(목)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최병목(극동대학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47	2010.11.29.(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황혜원(청주대학교)	충북지역 아동·여성안전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48	2011.5.16.(월)	충북발견연구원	최용환(충북발견연구원)	충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문제		
49	2011.6.24.(금)	단양대명리조트	유용식(세명대학교)	충청북도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연구		
50	2011.10.27.(목)	증평군노인복지관	김창기(충주대학교)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51	2011.11.28.(월)	충북도립대학	정재욱(충북테크노파크)	지역적 접근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52	2012.3.27.(화)	청주평생학습관	곽경인(서울시사회복지사업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53	2012.4.13.(금) 13:00	승덕재활원	장기성(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법 시행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대응방안	함께하는 복지포럼연구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북협회	후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54	2012.5.30.(수)	뫼다무지개	김연수(백석대학교)	2012년 상담 활동가를 위한 상담슈퍼비전		
55	2012.10.11.(목)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문국(신안산대학)	자활사업의 현재인식과 사회적 경제조직체로의 전망		
56	2012.10.19.(금)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김영신(한국노인복지중앙회)	충북 노인복지를 위한 역량강화 논의와 방안		
57	2012.10.31.(수)	서원대학교	박홍재(오를랜드대학교)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58	2012.11.1.(목)	통영 베일리조트	송영각(걸음마 넷)	보육제도 변화에 따른 시설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59	2012.11.23.(금)	충청대학교	김준환(충청대학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개선방향		
60	2012.12.6.(목)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김 윤(광주보건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내부 마케팅을 통한 서비스 경영		
61	2012.12.20.(목)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최종미(충청해바라기아동센터)	— 70 — 동성폭력사례 및 처리 구제방안		

62	2013.2.27.(수) 13:00	행복카페	이미진(건국대학교)	노인복지실천에서 서비스 질의 갈등을 풀다	함께하는 복지포럼연구소,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63	2013.6.14.(금) 14:00	가톨릭청소년센터	류시문(한맥도시개발) 김혜미(한국사회복지공제회)	융합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국가론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	함께하는 복지포럼연구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64	2013.9.24.(화)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서광국(중앙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후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65	2013.9.25.(수)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황명구(행동하는 복지연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찾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노인복지관협회,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충북지역자활센터 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북지회, 행동 하는 복지연합	후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66	2013.10.1.(화) 15:30	대명리조트 단양	정미예(대원대학교)	충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적정화 방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북협회	후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67	2013.10.25.(금) 10:00	더빈컨벤션	유성중(전 충청북도교육감)	노인복지시설 근무자의 전문성 지향	충북노인복지협회	후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68	2013.11.5.(화) 14:00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박홍재(뉴질랜드 오克兰드대학교)	뉴질랜드 노인복지의 현실과 과제	한국교통대학교 보건복지교육연구소	
69	2013.11.22.(금) 10:00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윤병훈(전, 양업고등학교)	시설아동 교육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충북아동복지협회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0	2013.12.7.(토) 14:00	청주시청소년수련관	김윤모(사회복지법인 유스투게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함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자살 유발 정서·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1	2013.12.16.(월)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김명현(대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혜정(충북도청 여성정책관)	충북 맞춤형 다문화 정책	충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2	2014.5.13.(화) 10:30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성규탁(한국효사상연구소)	새 시대의 효 : 전통-변화-적응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3	2014.10.30.(목) 16: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심의보(충청대학교)	퇴직 전문가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4	2014.11.24.(월) 16: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배노제(한국마케팅교육연구소)	비영리조직 서비스 마케팅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5	2014.11.25.(화)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서정민(충북융합복지연구소)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6	2014.11.25.(화) 15:5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서정동(인트컴)	사회복지조사와 인포그래픽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7	2014.12.11.(화) 16:00	켄싱턴리조트 충주	배노제(한국마케팅교육연구소)	비영리조직 전략 기획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8	2014.12.23.(화) 13: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서경숙(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의사소통을 통한 자기분석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79	2014.12.23.(화) 19:00	충북문화예술회관	전찬근 외 22명	<연극세미나> 장애인복지 실태 현황 및 발전 방안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80	2014.12.29.(월) 14:00	청주시정보화교육센터	성웅경(서원대학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생활 관리 방안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81	2014.12.29.(월) 16: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심의보(충청대학교)	고령화 사회의 성공적인 노화 -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82	2015.10.15.(목) 14:00	청주시립도서관	신성철(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현황과 과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83	2015.10.22.(목) 13:30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중앙정부 사회보장장비 방안에 대한 충북지역 복지계 대응 토론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북아동청소년포럼,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충북지역자활센터협 회, 충북노인복지관협회, 충북장애인복지 관협회,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충북장애 인직업재활시설협회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84	2015.11.20.(금) 15:10	대명리조트 단양	백운기(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토론회		
85	2016.6.21.(화)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유용식(세명대학교) 강신욱(전, 청주복지재단) 오정아(충북대학교)	민·관협력 지역복지 모델개발; 마을에서 성장한다		
86	2016.12.26.(월)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나동석(청주대학교)	충청북도 사회복지수준 분석		
87	2017.2.10.(금) 14:00	충북연구원	최은희(충북연구원)	충북도민 복지의식 조사	충북연구원	
88	2017.11.23.(목)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조추용(꽃동네대학교)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고독감이 노인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89	2017.12.7.(목) 14:00	청주대학교	김현진(청주대학교)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 표준프로그램 개발 연구		

90	2018.5.23.(수) 14:00	가톨릭청소년센터	양준석(행동하는복지연합) 손영환(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직능단체	2018 충북사회복지계가 제안하는 충북지역 복지의제 「복지는 생활입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충북지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북 협회,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충북지역자활 센터협회, 충북장애인직업시설협회,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충북다 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의회, 충북노 인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북 지회, 행동하는복지연합	
91	2018.11.28.(수)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박종효((사)일하는공동체)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92	2018.12.19.(수)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조추용(꽃동네대학교)	정신건강과 치매관련 요인이 치매태도에 미치는 영향		
93	2019.7.11.(목) 14:00	다락 441	김영석(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신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할과 방안		신문 발간 20주년 기념
94	2019.11.29.(금) 14:00	가톨릭청소년센터	조추용(꽃동네대학교)	커뮤니티 케어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의 모델 연구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95	2021.11.26.(금) 14: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윤호중(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노인복지관의 역할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96	2021.12.7.(화) 13:0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김현진(청주대학교)	충북지역 사회복지관의 운영진단과 발전적 대안 모색	충북사회복지관협회	
97	2022.10.5.(수) 14:00	증평군립도서관	김제선(백석예술대학교)	충북형 지역사회기반 일자리사업 '1인 1가'의 성과 및 참여장애인의 고용유지 요인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98	2022.12.14.(수) 15:00	서원대학교	김준수(서원대학교)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관의 ESG 경영실태와 대응과제		
99	2023.11.28.(화) 14:00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숙(한국교통대학교)	스마트복지 플랫폼 효과성 연구 발표 및 성과공유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충북협회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	2023.12.6.(수) 13:30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김영석(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제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

- 발 행 일 : 2023년 12월 6일(수)
 - 발 행 인 : 김영석(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층
 - 전 화 : 043)234-0840~2
 - 팩 스 : 043)234-0849
 - 홈페이지 : www.043w.or.kr
-